

4차산업혁명 기술로 지역현안 해결

전주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전주시가 IoT(사물인터넷), 스마트 열화상카메라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관광과 안전분야 등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SW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블랙아이스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개발사업이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소재 강소 SW기업과 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ICT 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SW 품질관리, 마케팅 등을 병행 추진해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적극 돕는 게 핵심이다.

먼저, 스코인포(대표 두근철)가 수행

하는 IoT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은 와이파이(Wi-Fi), CCTV영상 등 IoT 장비를 활용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체류시간, 재방문률 등 양질의 유동인구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시는 한옥마을과 객사길 등 관광객 분석을 위해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에 의존해왔다. 시는 스코인포의 프로그램이 개발될 경우 자체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관광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행동 예측이 가능하게 돼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관광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하랑컴퍼니(대표 김문성)가 수행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블랙아이스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개발 사업은 주변 기온과 도로 온도, 기상청의

기상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블랙아이스 발생을 예측하고 이를 운전자와 도로 관리기관에 위험을 알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최근 5년간 6600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겨울철 블랙아이스 결빙사고에 대한 예방이 가능해 겨울철 취약 구간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지역SW서비스 사업화에 선정된 두 사업은 전주시 관광정책 분야와 시민안전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연중 제공

지역 제한 없이 발생하는 사고 보험 청구 가능

전주시민들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생활 속 자전거 타기를 장려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연중 제공한다.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들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지역의 제한 없이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소유 자전거 뿐만 아니라 대여 자전거 사고 시에도 청구 가능하다. 또 사고 후 즉시 보험 청구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 인해 우연히 입은 사고도 보장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상해위로금 30~60만원(병원진단 4주 이상 필요) △별급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시는 자전거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과 대중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동 자생단체 회의 등 각종 회의와 교육도 활용해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18년 자전거보험 가입 후 지금까지 507명에게 4억 3백만원의 보험혜택을 지원해왔다.

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전주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청구서식 등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063-281-2448)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신규 추진

전주시, 청정대기환경 조성 위해 51억원 투입해 올해 280대 보급키로

수소선도도시인 전주시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에 나선다.

시는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을 늘려 청정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51억원을 투입해 '2020년 제1차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수소전기차를 개인 또는 법인이 구매할 시 1대당 36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우선 시는 올 상반기 중에 140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모두 소진되거나 전주시 제1호 수소충전소가 완공된 이후 추가로 140대를 보급키로 했다. 송천동에 들어서는 제1호 수소충전소는 오는 6월까지 조성되며, 완주군 봉동에도 올해 안에 충전소가 완공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신청기간 이내라도 예산소진 시 사업은 종료되며, 개인과 법인 모두 1대까지만 보급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2020년 2월 29일 이전부터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시는 특히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나 노후 경유차를 대체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급비율의 20%인 28대를 우선 보급키로 했다. 단, 취약계층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및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부서나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주

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자동차 영업점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가 구매자가 제출한 서류를 23일 이후부터 환경부 무공해 자동차 종합포털을 통해 전주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 신청장령제국 관계자는 "수소전기차는 주행 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에어필터를 통해 외부공기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며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에 시민들과 기업체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주시 수소경제탄소산업과(063-281-2723) 또는 전주시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농업기계 임대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연중 운영

영농 편의 제공 위해 57종 139대 농업기계 농업인에게 임대

전주시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농업기계 임대서비스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시는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를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2020년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연중 운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동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중인동 전주농협 모악창고 내 본소에서 관리 중인 57종 139대의 농업기계를 전주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300건을 목표로 추

진한다.

신청자격은 농기계 운용능력이 있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인 신청 가능하며 임대를 원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063-281-6721~2)로 사전 접수하면 된다.

또 임대는 농가 1인당 1대까지 임대 가능하며 기간은 기종별로 1~3일까지 할 수 있다.

임대료의 경우 기종별로 농업기계 구입가격의 0.2~0.4% 수준으로 트랙터는 기종에 따라 7만원~15만원, 굴삭기는 6만원~8만원, 경운기는 1만 5000원 정도이다.

이와 관련 시는 농기계 임대와 병행해 농기계 취급조작 교육과 안전사용 교육 등 농기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15년 임대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6989건의 농업기계를 전주시 농업인들에게 임대해왔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이 농업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 사전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농기계를 정비하고 신규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의 영농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연중 접수

전주시, 단독주택·공동주택 주차장 조성비 일부 지원

전주시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유희시설이나 담장,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주차 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과 노후 공동주택에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연중 접수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6년 6월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희시설에 대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되며, 주차장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에 1000만원까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또 골목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게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교통안전과(063-281-5024)로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후 담당직원이 현장 방문해 추진가능성을 확인한 뒤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민은 올해 12월 10일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장병호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기도 하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충을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이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서 발생해 야간으로 이어진 산불을 지난 20일 오전 11시 진화를 완료했다. 울산시 울주군 20일 07시43분47초 화재현장 사진. (산림청 제공)

산림청, 울산시 울주군 산불 진화 완료 밝혀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큰 불 확산될 수 있어" 주의 당부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서 발생해 야간으로 이어진 산불을 지난 20일 오전 11시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일 오전 중 진화완료에 위해 국가기관 산불진화헬기 총동원령을 내려 5시간여 만에 주불을 진화하고, 동원된 헬기는 산림청 18대, 국방부 6대, 소방청 4대, 경북 경주 1대, 경남 김해 1대, 국립공원

1대이다.

진화에는 헬기 뿐 아니라 공중진화대원 등 진화인력 2천여명(공무원 800명, 산불진화대원 160명, 소방·경찰 등 1,040명)과 산불진화정비(산불지휘차 3대, 산불진화차 13대, 소방차 96대)를 동원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주력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 했다.

19일 울주군 웅촌면 장사리골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인접지에서 시작

해 강한 바람을 타고 동해고속도로 쪽으로 확산되어 약 200여ha 이상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산림청은 돌풍으로 인한 재발화에 대비해 산불진화 헬기 4대를 현장에 대기하고 진화대원을 배치 감시하고 있다.

박종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장(청장)은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바람을 타고 큰 불로 확산될 수 있어 산림인접지에서는 절대로 화기취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